

中企 졸업해도 세제혜택 최대 5년 ‘100개 유망기업’ 3년간 밀착관리

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상장社는 최대 7년간 中企 혜택 중견기업, 中企 특례 18개로 늘려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이 몸집이 커져 중견기업이 돼도 최대 5년간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기업은 최대 7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례도 현행 14개에서 ‘이공계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등 18개까지 늘린다.

중견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 3년간 밀착관리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연구개발(R&D)·고용세액공제 등 기준에 받았던 세제 혜택 유예기간을 기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기업보다 2년 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최대 7년간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되면서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감면 등의 혜택도 2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기존 14개의 ‘중견기업법 특례’에 더해 ‘중견기업법’을 추가 개정해 ▲‘상생협력법’ 기술유용금지등(2개) ▲‘이공계

중소→중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3년 → 5년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2년 후 추가 연장 (총 7년) ▶ 중소기업 졸업 후 R&D 투자 세액 공제 점검 구조 도입	▶ 100개 유망기업 선정, 3년간 밀착 관리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업 점프업 지원 (성장바우처 제공, 정부 사업 우대)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공공정보 개방·활용 통한 기업 성장 뒷받침
▶ 민간 시장 자금 조달 지원 (정책자금→민감금융 연계) ▶ 중소기업 M&A 지원 확대 ▶ 민간 투자 연계 R&D	▶ 기업 투자자 매칭 ▶ 이용 편의제고 (정책금융 정보통합 제공, 중견 진입 기업 맞춤형 정보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대기환경 보전법’ 비산 배출 시설 정기점검 비용 지원 등 4개 혜택을 더 준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양자기술, 첨단의료, 인공지능(AI), 차세대 물류 등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 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를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허용한다.

제품 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 형태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 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인 연간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비율은 10%, 중견기업은 13%, 대기업은 15%다.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 중견기업 진입 전후의 기업 100개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우선 성장 역량이 있으면서 신시장·신사업 진출, 기술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을 선발한다. 민간 투자(VC·C VC 등)를 받았거나 창업기업과의 기술 협력 계획을 가진 기업 등을 우대해 민간의 선별 기능과 지원 역량도 활용 한다.

전담 디렉터를 중심으로 스케일업 전

략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풀과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별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인수합병(M&A)·해외 진출·재무 관리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네트워크 풀을 활용해 문제 해결, 기술 협력·이전,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 바우처를 발급해 일부 주요 서비스에 대해 기업 당국비 2억원 한도에서 비용도 지원한다.

수출, 인력, R&D, 융자·보증 분야 정부 지원 사업 우선 선발, 가점 부여 등도 우대한다. 수출의 경우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 우선 선발·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기업 성장 지원 R&D 사업 내 전용 트랙, 가점 부여, 연구비 집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 융자 상환 기간 연장, 신산업 진출·설비 투자 등 자금 지원 우대 선정도 추진한다.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술 보증 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M&A 중개 기관과 함께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와 신사업 진출을 돋는다는 구상이다.

대출과 보증 지원을 강화해 M&A 소요 자금 마련을 돋고 장기적인 기업 승계형 M&A 특례 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클라우드 제약 없이 LLM 선택”

SKC&C, 맞춤형 AI 랜딩존 선봬

생성형 AI 구축 기간 30% 단축 운영 비용도 10% 이상 절감 가능